민주 '이해찬-박지원 카드' 변수

〈당대표〉 〈원내대표〉

이해찬 제안에 박 최고위원 고심

"당권 장악 위한 친노 꼼수" 비판

민주통합당의 19대 국회 새 원내대표를 뽑기 위한 경선전이 25일 본격 시작된 가운데 친노(친노무현)계에서 박지원 최고위원을 원내대표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경선전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현재까지 원내대표 경선은 이낙연·박기춘·전병헌 의원과 유인태 당선자 등 4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유일한 호남 의원인 이낙연 의원(4선·담양함평영광장성)은 호남 의원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5차례에 걸쳐 대변인을 맡은 경력이 최대 강점이다.

박지원 최고위원의 측근인 박기춘 의원(3선·경기 남양주을)은 '수도권 대표론'을 전면에 내걸었다.

전병헌 의원(3선·서울 동작갑)은 정책 전문성을 내세우고 있으며 대선 주자인 정세균 상임고문의 지원을 받고 있다.

유인태 당선자(3선·서울 도봉을)는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았던 재야 출신 의원으로, 참여정부 출범 후에는 정무수석을 맡은 범친노(친노무현)계로 분류된다.

반면, 출마를 검토했던 전남의 우윤근 의원(3선·광양구례)은 호남 후보단일화 차원에서 출마를 포기했다.

또 이번 경선의 변수로 꼽혔던 신계륜 당선자(4선·서울 성북을)와 박영선(3선·서울 구로을), 신학용(3선·인천 계양갑) 의원은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

문제는 당내 최대 계파인 친노계에서 박지원 최고위원을 원내대표감으로 낙점했다는 것.

이낙연 의원은 이날 "박 최고위원이 이해찬 전 총리로부터 원내대표 제안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박지원 최고위원도 "친노 측으로부터 '이해찬-당대표, 박지원-원내대표'란 투트랙 전략을 제안받은 것은 사실이다"며 "수락하지는 않았지만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또 "친노 측에서 서명운동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전했다.

박 최고위원은 때문에 이날 원내대표 경선에 참가한 출마자를 일일이 만나 의견을 들을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친노계의 움직임은 이 전 총리의 최근 '호남 원내대표론'과 궤를 같이한 것으로 당권 장악을 위해 원내대표는 호남에 양보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원내대표를 친노계가 가져갈 경우 당권 장악이 여의치 않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당 안팎에서는 친노계가 총선 패배의 책임을 뒤로 하고 당 장악에만 몰두하고 있는 비판이 나온다. 원내대표를 지명한 뒤 당권을 장악하고 나아가 대선후보를 자신의 계파로 선택하는 등 당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부터 이틀 동안 후보등록을 하고, 27일 기호 추첨을 하며 다음달 4일 경선을 실시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통합당 문성근 대표 권한대행이 25일 오후 서울시립대에서 열린 대학 반값등록금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학생들과 함께 등록금 문제를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 전대 앞두고 '시끌시끌'

당대표·원내대표·최고위원 등 내정설에 쇄신파 강력 반발

새누리당이 다음달 15일 치르는 전당대회를 놓고 시끄럽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체제 속에서 여는 첫 전대까진 20일 가량 남았지만, 라인업이 대략 정해졌다는 얘기가 나돌면서 당내 쇄신파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쇄신파 의원들은 25일 현재까진 추이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경우에 따라 전대 불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구주류·친이계가 사실상 무너진 상황에서 쇄신파까지 전대에 불참한다면 반쪽짜리 전대로 전락, 흥행을 장담할 수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당 안팎에선 '대표 황우여, 원내대표 서병우, 정책위의장 이주영'하는 이른바 카더라식 소문이 나돌고 있다.

친박계 핵심인 유정복·이혜훈 의원과 정우택 당선자가 선출직 최고위원이 될 것이라는 말도 있다. 당사자 또는 친박계 측에선 이 같은 소문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남경필·김정권·권영진·구상찬 의원 등 쇄신파 의원들은 지난 24일 모임에서 "전대가 각본대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당권 후보로 거론되는 남경필 의원은 입장을 정하지 않은 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일각에선 사전 기 싸움 성격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없지 않다.

세가 약한 쇄신파가 명분과 여론을 앞세워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박근혜 경고

"분열 땐 국민께 면목없고 부끄러운 일"

지도부 구성 당내 갈등 직접 제어 나서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4·11 총선 이후 당내 분열과 갈등에 대해 작심한 듯 경고 메시지를 쏟아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충북 청주에서 열린 총선공약실천본부 출범식 참석 후 동행한 기자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절박한 호소로 국민으로부터 표를 얻었는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정쟁에 빠져들었다"고 개탄하면서 "이런 식이라면 당은 자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당내에서 분열과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요인은 대략 세 가지. 5·15 전대 원내대표 경선에 친박계 인사 출마론과 김형태 당선자 탈당 계기로 제기된 박 위원장인의 장막논란, 김문수 경기지사 등 비박 잠룡 진영에서 박 위원장을 향해 쏟아내고 있는 비판이다.

박 위원장은 "경선도 당원들께 진정성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하면 되는 것"이라며 "뒤에서 계속 언론플레이 하고 뭐가 어떻게 짜여져있느니, 있지도 않는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당을 아주 흐리게 만들고 국민이 '또 정치권이 저 짓을 하느냐'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은 당을 해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전대를 앞두고 친박계 인사들의 출마설이 떠돌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들을 겨냥한 것일 수도 있지만, 과거 친이계처럼 친박계가 당직을 독식한다는 쇄신파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이를 직접 제어하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을 향해 날선 비판을 가하고 있는 김 지사와 정몽준 전 대표 등 비박 진영 대권주자를 직접 겨냥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당 안팎에선 박 위원장이 비판한 정쟁의 범위에 대권경쟁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박 위원장이 이날 작심 발언을 하면서 5·15 전대와 연말 대선을 앞두고 달아오르던 당내의 선거 분위기는 당분간 냉각 모드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박 위원장은 "민생을 챙기기보단 정쟁이나 다른 것부터 해야겠다면 그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총선이 치러질 땐 가만히 있다가 끝나자마자 이런 식으로 분열을 일으키는 일은 국민에게 부끄러운 일"이라며 "면목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연합뉴스

여야 '국회 몸싸움방지법' 처리 재합의

내주초 본회의 소집…18대 임기내 통과 주목

새누리당의 입장 번복으로 지난 2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된 국회선진화법안(일명 몸싸움방지법)과 관련, 여야가 막판 조율 끝에 장점 합의, 18대 국회 임기 내 통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5일 물밑 협상을 통해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120일 이상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법안 처리 방안'에 합의를 도출했다.

이날 원내대표단 간 협상에 참석한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은 "합의점을 도출했다"며 "그동안 당 소속 의원들에게 협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설명 못했기 때문에 소속 의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도 "솔로몬의 판결 앞에 아이를 내어주는 엄마의 심정으로 지도부가 새누리당의 협상안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양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회동을 통해 법사위에서 120일 이상 계류 중인 일반 안건에 대해 상임위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회부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국회의장은 본회의 회부 요청이 있으면 우선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단 간 협의를 요구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무기명 투표로 본회의 회부 절차를 진행토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당이 막판까지 주장했던 '표결'과 '협의' 사이에서 절충안을 찾은 것이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안건이 180일을 넘길 경우 국회의장이 재적 과반수로 표결해 상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고 민주당은 표결이 아닌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로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해야 한다고 팽팽히 맞서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합의안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주초 본회의를 소집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

민주 전대 준비위원장

김성곤 의원 선임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준비위원장에 여수의 4선 김성곤 의원이 선임됐다.

민주당은 25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6월로 예정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위원장에 김성곤 의원, 부위원장에 설훈·최규성·오영식 당선자 및 의원, 총괄본부장은 윤호중 사무총장을 각각 선임하는 등 준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또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는 문희상 전 국회부의장, 부위원장에는 변재일·양승조·우윤근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박지경기자 jkpark@

박근혜 사과

김형태·문대성 당선자 파문 관련

"철저히 검증 못한 점 죄송스럽다"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KBS라디오연설에서 김형태·문대성 국회의원 당선자 파문과 관련, "선거가 끝나자마자 어려운 민생을 해결하는 일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하는데, 일부 당선자들의 과거 잘못들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리는 일이 있었다"며 "저희 당에서 철저히 검증하지 못했던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특히 "선거기간 약속했던 데로 취업·보육·집·노후 걱정을 덜어드리는 가족행복 5대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19대 국회 개원 후 100일 이내에 관련 법안들을 발의하겠다"며 "약속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여러분께 정치가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